

2013 서울시 7급 행정학 기출문제

(2013. 9.7 시행)

해설 : 방성은 교수(월비스고시학원 행정학 전임)

1. 정부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사회자본(social capital)을 형성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와 같이 정부가 사회자본을 형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민참여가 보다 수평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② 정부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 ③ 법적 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립시켜야 한다.
- ④ 자발적 조직들 간의 연계망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 ⑤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해결하려면 수직적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

해설 : ⑤ 신뢰와 같은 사회자본은 협력과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여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해결하게 하는 순기능이 있다. 즉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연계망(네트워크)이 구축되어야 하며 연계망은 수평적 협력관계를 특성으로 한다(2014 비타민행정학 96페이지). 답: ⑤

2. 신공공관리 이론과 뉴거버넌스 이론과의 비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두 이론 모두 투입보다는 산출에 대한 통제를 강조한다.
- ② 신공공관리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명확하게 구분하는데 비해서 뉴거버넌스는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는다.
- ③ 신공공관리는 조직내부 문제, 뉴거버넌스는 조직간 문제를 다룬다.
- ④ 신공공관리는 부문간 경쟁을, 뉴거버넌스는 부문간 협력을 강조한다.
- ⑤ 두 이론 모두 정부실패를 이념적 토대로 설정하여 그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해설 : ① 주의를 하여야 하는 지문이다. 신공공관리론은 산출을, 신국정관리론은 과정을 중시하지만 전통적 이론에 비하여 두 이론 모두 시민에 대한 대응성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산출에 대한 통제를 강조한다는 점은 유사하다. ② 신공공관리론과 신국정관리론(뉴거버넌스)의 유사점은 공·사부문의 상대화, 정부개혁(작은 정부), 정부역할로서 steering 강조이다. ⑤ 주의를 해야 하는 지문이다. 신국정관리론은 신공공관리론의 지나친 시장주의에 반발하여 대두되었지만 뿌리를 찾아가면 결국 두 이론 모두 정부실패의 치유에서 출발한다. 신공공관리론은 시장지향적 작은 정부를 구현함으로써, 거버넌스와 뉴거버넌스(신국정관리론)은 참여지향적 작은 정부를 구현함으로써 정부실패를 치유하고자 한다(2014 비타민행정학 174페이지). 답 : ②

* 신공공관리론과 신국정관리론

구 분	신공공관리(1980년대~현재)	신국정관리(1990년대~현재)
유사점	• 정부역할 : steering(목표설정) • 공·사 부문 구분의 상대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 인정 • 정부개혁(작은 정부, 정부역할 축소) • 시민에 대한 대응성(단, 소극적 대응성 VS 적극적 대응성)	
시대배경	1970년대말 재정위기와 정부실패 ⇒ 공공부문 혁신이라는 정권차원의 이념적 동기	1980년대 신공공관리론의 지나친 시장주의 ⇒ 신뢰, 협동, 조정 등 민주적 통치역량을 강화
차 원	정부가 민간부문과 연결하는 서비스전달망의 변화를 통한 미시적·실용적인 행정개혁 노력	네트워크, 파트너십, 공사협력, 신뢰 등을 강조하는 거시적·민주적인 정치체제에 관한 논의
초 점	결과중심의 행정개혁 내부 프로그램 개편	과정과 절차를 강조하여 정부와 사회조직 간 연결과 네트워크 형성
목 적	공공부문의 개혁을 통한 능률성 제고	민주적 거버넌스 역량의 강화
이데올로기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	신공동체주의 (신좌파의 시민주의+신우파의 자원봉사주의)
관리기구(주체)	시장주의에 입각한 정부	참여네트워크
관리방식	고객지향	임무중심
관리메커니즘	경쟁으로 서비스 품질의 사후적 확보	신뢰 및 협력과 직접 참여로 사전적 확보
시민관	수동적 객체로서의 '고객' (이기적 존재)	능동적 주체로서의 '주인' (공동체 주인이자 이타적 존재)
관료역할	공공기업가(자율성과 재량권 강조)	네트워크의 관리자, 조정자(계약과 책임 강조)
행정이념	능률성, 생산성	민주성
서비스 생산방식	민영화(privatization), 민간위탁	공동생산(co-production)
지향가치	결과(outcome) - 효율성, 생산성	과정(procedure) - 민주성, 정치성
문제해결 방식	시장적 방법, 민간경영기법 도입	정치적 방법, 다양한 참여자와 새로운 방법 모색
분석수준	조직 내(intra-organizational), 부문 내	조직 간(inter-organizational), 부문 간
재창조	정부재창조	시민재창조
정치·경영 관계	정치행정 이원론	정치행정 일원론

3. 신뢰성과 윤리문제가 국정 운영의 핵심 쟁점으로 제기되는 이유가 아닌 것은?

- ① 지방 분권화 증대에 따른 중앙정부의 통제력 약화
- ② 재정적 압박으로 인해 효율성 가치에 치중
- ③ 경제 논리를 중심으로 한 민간부문 관리기법의 도입에 따른 생산성 강조
- ④ 정치적 후원의 증대와 고위공직자의 정치화에 따른 부패 가능성 증대
- ⑤ 전통적 관리방식과 새로운 관리방식 간의 충돌과 갈등

해설 : ① 집권적일수록 민주성과 창의성이 저하되며 견제세력의 부재로 부패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 따라서 지방분권화를 통하여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는 것은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바람직한 현상으로서 신뢰성과 윤리문제의 쟁점으로 제기되지 않는다. ②③ 1970년대 말 정부실패로 인하여 대두된 신공공관리론과 신자유주의 사상은 행정의 시장화를 통한 생산성을 강조하므로 신뢰성과 같은 공적 가치들을 소홀히 하게 되므로 신뢰성과 윤리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제기된다. ⑤ 폐쇄적 의사결정과 수직적 통제와 같은 전통적 관리방식이 강조되어 새로운 관리방식과 충돌을 겪게 되면 사기저하, 불신 등을 야기하여 윤리의식이 저하되므로 윤리문제가 쟁점으로 제기된다(2014 비타민행정

학 623, 632, 783페이지). 답 : ①

4. 정치적 관점에서 바라본 정책 개념의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가치를 사실에 투사해서 얻은 행동계획
- ② 사회 전체를 위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의 결과
- ③ 주어진 목표달성을 위한 자원의 효율적·효과적 활용계획
- ④ 사회문제의 정의를 통한 문제의 해결방침
- ⑤ 목표와 수단에 대해 구속력 있는 정부기관이 내린 결정

해설 : 정치의 특성으로는 가치선택, 권력적 과정, 가치의 배분과 조정, 목표의 설정과 책정결정 등을 들 수 있다. ③은 행정적 관점에서의 정책 개념이며 전통적인 정치행정이론의 관점이다. 이 관점에서 행정이나 정책은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게 위한 효율적 수단을 모색하는 과정으로서 집행적 측면을 강조한다(2014 비타민행정학 18페이지). 답: ③

5. 정책결정 참여자로서의 관료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합주의는 관료의 적극적 역할을 옹호한다.
- ② 엘리트주의에서는 관료의 적극적 역할보다는 지배계층의 역할에 주목한다.
- ③ 철의 삼각에서 관료는 특수 이익집단의 이익에 종속되는 경향이 있다.
- ④ 다원주의에서는 외부집단이나 지배계층보다 관료의 역할을 더욱 중요시한다.
- ⑤ 이슈네트워크에서는 이슈에 따라 관료가 방관자가 되거나 주도적 역할을 하기도 한다.

해설 : ④ 다원주의는 관료의 역할보다는 외부집단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정책과정의 주도자는 이익집단이며 정부(관료)는 이익을 조정하는 중개인 또는 심판자 역할을 한다고 전제한다(2014 비타민행정학 199페이지). 답 : ④.

6. 합리모형에서 설명하는 합리성의 가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문제 상황에 대한 명확성
- ② 각 대안간의 우선 순위의 명확성
- ③ 목표달성에 대한 만족 기준의 명확성
- ④ 각 대안의 비용과 편익의 명확성
- 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명확성

해설 : ③ 만족기준은 주관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만족모형의 내용이다. 나머지는 합리모형의 내용이다(2014 비타민행정학 234페이지). 답: ③

7. 딜레마(dilemma)이론에서 딜레마 상황이란, 정책결정자가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곤란한 상황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런 딜레마 상황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바람직한 방법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정책결정자가 개인적 이익이나 판단으로 시스템 전체가 딜레마에 빠지지 않도록 한다.
- ② 이해관계자가 정책결정자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장치를 설계하거나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장단속에서 무인카메라 단속으로 변경되는 것이 정책승계이다(2014 비타민행정학 326페이지). 답: ④

9. 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허즈버그(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 이론론에 따르면 보수는 매우 중요한 동기요인이다.
- ② 내용이론에는 형평성이론과 기대이론이 있다.
- ③ 동기부여란 개인과 조직이 욕구의 결핍을 충족하기 위한 수단을 탐색하는 과정지향적 행동을 의미한다.
- ④ 포터(L. Porter)와 롤러(E. Lawler)는 보상의 공정성에 대한 개인의 만족감을 주요 변수로 삼아 기대이론을 보완하였다.
- ⑤ 매슬로우(A. H. Maslow)에 따르면 자기실현 욕구는 사람마다 큰 차이가 없다.

해설 : ① 보수는 불만족과 관련된 위생요인이다. ② 형평성이론과 기대이론은 과정이론이다. ③ 동기란 개인의 행위를 어떤 목적을 위해 일정한 방향으로 작동시키는 내적 심리상태로서 목표나 성과 지향적 심리상태이다. ④ 포터(L. Porter)와 롤러(E. Lawler)의 업적만족이론은 과거업적에 대한 보상이 공정하면 만족을 느끼게 되어 동기가 유발된다고 보는 이론으로서 맞는 지문이다. ⑤는 주의를 해야 하는 지문이다. 5가지 계층을 이루는 욕구순서의 경우 사람마다 큰 차이는 없지만 개별적 욕구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나이, 경력, 개인의 문제조건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2104 비타민행정학 358페이지). 답 : ④

10. 조직구조의 상황요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비일상적 기술일수록 공식화가 높아질 것이다.
- ②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집권화가 높아질 것이다.
- ③ 비일상적 기술일수록 집권화가 높아질 것이다.
- ④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공식화가 높아질 것이다.
- ⑤ 조직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공식화가 높아질 것이다.

해설 : ①③ 비일상적 기술(ex. 배아줄기세포연구)은 복잡성(분화)이 높고(전문가들이 분야별로 나누어 수행) 공식성이 낮고(내부규정없이 전문가들이 자율적으로 수행) 집권성이 높다(전문가들에게 권한이 위임). ②④ 환경이 불확실할수록 복잡성이 낮고(계층도 없고 통합수행) 공식성이 낮고(규정대로 할 수 없음) 집권성이 낮다(현장에서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권한이 위임). ⑤ 규모가 커질수록 복잡성이 높고(계층과 부서가 많아짐) 공식성이 높고(내부규정이 많아짐) 집권성이 낮다(하부로 권한이 위임됨).(2014 비타민행정학 381페이지) 답: ⑤

11. 갈등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직의 분업구조 관련 갈등예방을 위해서는 직급교육과 인사교류가 효과적이다.
- ② 자원의 희소성 관련 갈등예방을 위해서는 자원배분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 ③ 조직침체 극복을 위한 갈등조장을 위해서는 불확실성을 높이는 전략이 유효하다.
- ④ 개인의 특성 관련 갈등예방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의 공감대 형성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이 바람직하다.
- ⑤ 업무의 상호의존성에 따른 갈등예방을 위해서는 부서 간 접촉의 필요성을 늘려주는 전략이 유효하다.

다.

해설 : 업무의 상호의존성으로 발생하는 갈등은 부서 간 접촉의 필요성을 늘리면 갈등이 더욱 야기되며 접촉의 필요성을 줄이는 등 상호의존성을 줄여야 해소될 수 있다(2014 비타민행정학 440페이지).

답: ⑤

12. 지식정보사회의 도래는 사회의 모든 곳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음 중 지식정보사회가 행정조직에 미칠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오히려 정부관료제의 계층제적 구조가 강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 ② 환경에 신속하게 적응하기 위해 조직구조를 보다 경직화할 필요가 있다.
- ③ 조직의 신축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 ④ 수평적인 형태로 연결된 네트워크 구조가 증가할 것이다.
- ⑤ 조직의 신축성을 보장하는 조직이론의 탄생을 강요하고 있다.

해설 : ② 환경에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직구조를 보다 유연하고 신축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①은 집권화설의 내용이다(2014 비타민행정학 384페이지). 답: ②

13. 「국가공무원법」 제46조에 나타나 있는 보수결정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정확한 것은?

- ①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가계생계비, 민간의 임금,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도록 계급별·직위별로 정한다.’
- ②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민간의 임금,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도록 계급별·직위별로 정한다.’
- ③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민간의 임금,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도록 계급별로 정한다.’
- ④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와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도록 계급별·직위별로 정한다.’
- ⑤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민간의 임금,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계급별·직위별로 정한다.’

해설 : ②가 정확한 내용이다. 이 중 민간의 임금을 고려한다는 것은 대외적 비교성을 의미한다(2014 비타민행정학 604페이지). 답: ②

(1) 기본급 - 2014 비타민행정학 604페이지

⑧ 종합결정급 : 우리나라는 직무급을 원칙으로 생계비 등도 고려하므로 종합결정급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근무연수, 생계비, 직무 등 다양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이중에서도 연공적 요소가 절대적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실적급제(연봉제+성과상여급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❶ 국가공무원법 제46조

- 1.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도록 계급별·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한다.
- 2.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물가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민간부문의 임금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4.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과의 비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계약직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채용계약에 따른다.
- ②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법적 근거로 국가공무원법을 따른다.
- ③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보수재원은 모두 국비로 충당한다.
- ④ 정무직 지방공무원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⑤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모두 임용권자가 대통령이나 소속 장관이다.

해설 : ① 자치단체의 공무원은 지방직으로서 지치단체장이 임명하므로 맞는 지문이다. 계약직 공무원 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임기제 공무원으로 변경된다. ②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적용을 받는다. ③ 지방공무원의 보수는 자치단체 재원으로 충당한다. ④ 정무직 지방공무원은 국회의 동의를 얻 을 필요가 없다. ⑤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자는 자치단체장이다. 답 : ①

15. 예산 및 조세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원가절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는 현금주의회계가 발생주의회계보다 유리하다.
- ② 부가가치세 같은 간접세는 비례세(proportional rate tax)라는 점에서 조세형평상 직접세에 비해 불공평하다.
- ③ 이로온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서비스에 정부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은 정부예산의 정치적 기능에 속 한다.
- ④ 출연금이 지원된 국가개발연구사업의 개발 성과물의 사용은 예산완전성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⑤ 예산이 하나만 존재해야 한다는 예산 한정성의 원칙은 입법부 우위의 예산원칙이다.

해설 : ① 원가는 고도의 회계학적 지식이 요구되므로 발생주의회계에서 원가정보를 보다 정확히 제 공할 수 있다. ②는 주의를 해야 한다. 세금부담자와 세금납부자가 다른 간접세(ex. 부가가치세, 특별 소비세, 주세 등)는 납세자가 직접 납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조세부담의 진정한 몫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 하므로 조세저항이 적고 정부서비스의 비용과 편익을 제대로 평가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간 접세 중 고가의 사치품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는 재분배 효과가 있으나, 일반소비재에 부과 되는 부가가치세는 같은 세율이라도 저소득층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므로 오히려 역진적이 다. 비례세는 동일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세원의 크기와 관계없이 일정한 세율을 부과하는 세제이다. 부가가치세는 10%를 동일하게 부과하므로 명목세율로 본다면 비례세이지만 실효 세율로 본다면 역진세에 해당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와 같은 간접세는 비례세라는 점에서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역진세 성격이라는 점에서 불공평한 것이다. ③ 외부효과는 시장실패로서 이를 해결하는 예산기능은 경제적 기능 중 자원배분 기능이다. ④ 정부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한 기관에 대해서는 개발한 기술을 제3자에게 유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발생한 기술사용 대가로 받은 기술료 수입은 일정비율(정부출연 금의 지분으로 받은 기술료의 20%이상)을 연구개발 관리기관에 납부하고 50% 이상은 연 구개발에 참여한 연구원에게 보상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재투자 등에 사용하므로 예 산에 계상할 실익이 없다. 따라서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빠뜨리므로 완전성원칙의 예외에 해 당되며 맞는 지문이다. ⑤ 예산이 하나만 존재해야 한다는 것은 한정성원칙이 아니라 단일성원칙이 다(2014 비타민행정학 668페이지). 답: ④

16.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운영관리를 위한 지침으로 효과적이다.
- ② 기획기능을 상대적으로 강조한다.
- ③ 회계책임을 명확하게 한다.
- ④ 예산비목의 증가를 통제하기 쉽다.
- ⑤ 입법부에 의한 예산 통제에 효과적이다.

해설 : ① 성과주의예산은 업무량과 단위원가를 곱하여 예산액을 산출하는 예산으로서 정보의 계량화를 통하여 관리상의 능률성을 제고시키고 운영관리 지침을 제공해주므로 맞는 지문이다. ②는 계획예산이다. ③④⑤ 성과주의예산은 사업 내에서는 전용이 가능하므로 회계책임이 모호해지고 의회의 회계적 통제가 곤란해진다(2014 비타민행정학 702페이지). 답 : ①

17. 우리나라 정부예산의 과목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우리나라 예산은 소관별로 구분된 후 목별로 분류되고 마지막으로 기능을 중심으로 분류된다.
- ② 성질별로 분류할 때 물건비는 목(성질)에 해당하고, 운영비는 세목에 해당한다.
- ③ 기능을 중심으로 장은 부문, 관은 분야, 항은 프로그램, 세항은 단위사업을 의미한다.
- ④ 장 사이의 상호용통(전용)은 국회의 통제를 받는다.
- ⑤ 세항의 경우 입법과목이고, 목은 행정과목이다.

해설 : ① 소관별-기능별-사업별-목별로 구분한다. ② 2007년부터 프로그램예산이 도입되면서 품목별 분류는 마지막 목에서 사용된다. 목은 인건비, 물건비 등이며 세목은 물건비의 경우 운영비, 여비 등이 해당된다. 따라서 맞는 지문이다. ③ 장은 분야, 관은 부문에 해당된다. ④ 장-관-항의 상호용통은 전용이 아니라 이용이며 입법과목이므로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세항-목은 행정과목이다(2014 비타민행정학 738, 753페이지). 답: ②

18. 라이트(D.S. Wright)의 정부간 관계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대립형은 정책을 둘러싸고 정부간 경쟁 관계를 유지한다.
- ② 포함형은 정부간 관계의 이상적 모형으로 간주된다.
- ③ 포함형은 정치적 타협과 협상에 의한 정부간 상호의존 관계이다.
- ④ 중첩형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종속된 경우이다.
- ⑤ 분리형은 재정과 인사 등의 독립적 기능이 있다.

해설 : ① 대립형은 Wright의 모형에 해당되지 않는다. ② 이상적인 모형은 포함형(포괄권위형)이 아니라 중첩형(중첩권위형)이다. ③은 포함형이 아니라 중첩형의 내용이다. ④는 중첩형이 아니라 포함형이다. ⑤ 분리형은 재정, 인사 측면에서 분리되어 있으므로 맞는 지문이다(2014 비타민행정학 정답: ⑤)

19. 서울시의 공동세 제도를 설명한 것 중 적절하지 못한 것은?

- ① 서울시 자치구간 재정력의 형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체의 본래의 의미를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 ③ 25개 자치구의 취득세의 50%를 서울시가 형평화의 논리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다.
- ④ 기초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⑤ 양여금과 비슷한 원리의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해설 : ③ 취득세가 아니라 자치구세인 재산세를 대상으로 한다. 서울시 재산세의 공동세제도(2008. 1. 시행)는 특별시 관할구역 내의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재정조정제도로서 지방세법을 개정(2007)하여 2008년 1월부터 시행하였다. 구세인 재산세를 특별시와 자치구 간 공동세화(특별시분 재산세와 자치구분 재산세는 각각 재산세액의 100분의 50)하고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라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을 관할구역 내의 자치구에게 균등배분(1/N)함으로써 수평적 불균형을 시정하는 효과가 있다. 반면 서울시 재원을 교부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직적 불균형은 시정하지 못한다. 한편 양여금제도는 국가가 징수한 국세 중 일부세목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치단체의 특정 사업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양여하는 자금으로서, 1991년부터 채택되었다가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을 그 성격에 따라 국고보조금 대상사업 등으로 재편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폐지되었다. 폐지된 양여금제도는 국가와 자치단체 간 수직적 불균형을 시정하는 제도로서 자치구 간 수평적 불균형을 시정하는 서울시 공동세제도와는 다르지만 세원을 공동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답 : ③

* 지방양여금 : 1991년에 국가가 징수한 국세 일부세목의 세액을 지방의 특정사업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양여하는 지방양여금제가 도입되었다. 양여금제는 국세의 일부세원을 국가와 지방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방재원의 확충과 불균형시정을 도모하는 제도로서, ㉠ 일부 세액을 지방에 양여하는 점에서 내국세 총액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부세와 다르고, ㉡ 그 비용용도가 포괄적인 점에서 그것이 세밀히 한정되는 국고보조금과도 다르다. 지방양여금은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방양여금은 2004년에 폐지하였다.

20. 행정에 대한 정치적 통제와 관료제의 자율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직업공무원이 선출직 공무원에게 책임을 지도록 조직화된 이유는 정부의 대응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 ② 행정에 대한 정치적 통제의 강화는 행정의 안정성과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다.
- ③ 사회문제가 복잡해짐에 따라 직업공무원들의 행정적 재량행위에 대한 더욱 엄격한 통제가 요구된다.
- ④ 정부의 대응성과 능률성은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가진다.
- ⑤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해서는 관료제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

해설 : ① 직업공무원제는 특권집단화라는 문제를 야기하는 폐쇄적인 인사제도로써 대응성이 저하된다. 따라서 선출직 공무원에게 책임지도록 하는, 정치적 임용 등 엽관주의적 인사는 대응성을 제고시키므로 맞는 지문이다. ② 정치적 통제의 강화는 외부통제로서 안정성이나 능률성이 아니라 민주성을 제고시킨다. 반면 내부통제는 능률성을 제고시킨다. ③ 사회문제가 복잡해질수록 직업공무원들의 재량권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만약 재량행위를 엄격히 통제한다면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가 곤란해진다. 한편 재량권이 증가함에 따라 절차적 통제가 필요하다. ④ 대응성과 능률성은 상충관계이다. 주민요구에 신속히 반응하는 것은 오히려 행정내부의 능률성을 저하시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주민의 출장소 설치 요구를 수용한다면 투입(비용)이 증가해진다. ⑤ 통제가 적어야 능률적인 행정이 가능하다. 통제가 많으면 각종 규정을 준수해야 하므로 능률적 행정이 곤란해진다(2014 비타민행정학 521, 924페이지). 답 : ①

